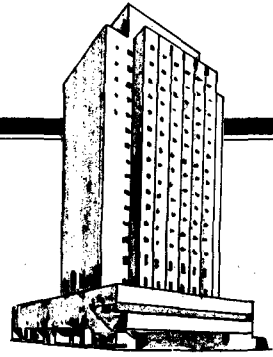


소 식

기관단체



■ 농축산물 수입예시제 실시예정

정부는 미국의 종합무역법안이 8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시장개방압력이 가중될 것에 대비하여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불공정무역국가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처하기로 했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해 수입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수입자유화에 시계획(개방일정)을 발표하고 공산품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를 철폐하는 등 대외시장개방정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 농지세 기초공제액 210만원으로 인상

내무부가 확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보면 89년도부터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144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이 많은 농가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세율을 조정하는 초과누진제를 적용해 세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서울체제도 현행 16단계에서 8단계로 간소화하고 과세농가 32만2천가구의 61.5%인 19만8천가구가 농지세를 완전면제 받게 된다.

농지세 과표 및 세율

과 표	세 율
250만원 이하	5%
500만원 "	10%
800만원 "	15%
1,200만원 "	20%
1,700만원 "	25%
2,300만원 "	30%
5,000만원 "	40%
5,000만원 초과	50%

■ 절대농지 보존기준 완화

정부는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해 농공단지조성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절대농지보존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농공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농공단지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농공단지내 절대농지가 10%이하만 들어있어도 농림수산부장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요건을 크게 완화해 절대농지가 30%미만 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만으로 조성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농기계가격 10월부터 자율화

지난 83년부터 행정지도가격으로 묶여있던 농기계값이 금년 10월부터 자율화되어 시장기능에 맡겨졌다.

그동안 정부가 농기계가격을 통제하여 제품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일가격제를 운영하여 품질향상 및 농기계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였기에 자율화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농기계값이 크게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정부는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지원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등 농기계값 자율화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로 했다.

■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 광주에 계란집하장 부지선정 마쳐, 연내가동 가능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조합장 강희구)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에 부지를 매입하고 연내에 계란집하장 운영이 가능해졌다.

계란유통 근대화와 악덕상인의 계란가격조작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할 집하장은 설치자금 1억 5천만원의 용자와 9천만원의 정부보조 및 6천만원의 자체조성 등 총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써 악덕상인에게 당하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채란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백신가격인상 시정명령**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바이오텔화학, 녹십자수의약품, 대성미생물연구소,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한국미생물연구소 등 동물약품업체가 백신가격 담합 행위를 했다고 지적,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백신품목을 담합해 가격을 인상했었다.

■ **88년도 농어촌개발기금 수정 46.6%증액**

정부는 지난 9월 9일 농어촌개발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88년도 지역개발기금운용 규모를 2,500억원에서 3,665억원으로 증액하고 89년도 운용규모를 2,950억원으로 확정했다.

88년도 증액분은 농지구입자금·비닐하우스나 농산물가공시설 등 농업개발·수산개발 등에 추가로 지원된다.

89년도 기금운용사업의 역점은 농민들의 농지구입 확대에 두고 1,600억원을 배정하였다. 비닐하우스, 부업단지 등 농업개발에 585억원, 읍면 상하수도 시설에 180억원, 시골 민간병원 시설지원에 81억원, 환경개선에 85억원을 배정했다.

이들 자금의 금리는 5~8%로 2년 거치 1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5년 상환까지 있다.

■ **한우개량단지 100개소로 확대**

축협중앙회(회장 명의식)은 한우 육용화 개량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우개량단지를 현재 32개소에서 91년까지 1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개량사업초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대졸 이상의 담당지도원을 배치하고 한우개량단지를 시범축산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고시**

보사부는 농산물에 잔류한 농약으로부터 올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약잔류허용기준안을 9월 1일 고시했다.

1년간의 홍보기간을 갖고 89년 9월부터 실시할 캡타폴, 디디티 등 농약17종의 잔류허용 기준치를 넘은 쌀, 보리, 감자, 배추, 사과 등 28개 농산물은 출하와 판매가 금지되며 제조가공식품의 재료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앞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를 실시 잔류허용 기준치를 넘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 **추곡수매값 각 기관단체별로 이견**

벼 수확기를 앞두고 각 기관단체별로 추곡수매값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87년도 추곡수매는 547만섬을 76,590원에 수매했었다. 농림수산부는 14% 경제기획원은 10%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난해보다 22.4%인상된 81,590원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주부클럽연합회는 8~12%선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연맹은 도시영세민 사정을 감안해 전년 수준(14%)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인 농협은 임시총대회를 통해 19.3%인상을 주장하였다. 전국농민협회, 카톨릭농민회는 40.7%인상된 10,700원이 넘게 인상되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 **축협 육가공 공장 건립**

축협중앙회는 축산물의 안전적 판로기반 구축을 위해 91년까지 일산 50톤규모의 육가공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소비추세가 점차 가공식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식품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위생제품을 생산키 위해 소시지, 햄, 베이컨, 통조림 등을 본

격 생산하기로 했다.

■ 경제구조 조정자문위원회 중간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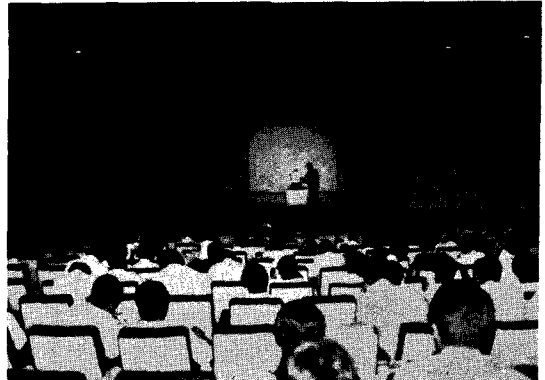
정부가 취해야 할 경제정책방향은 국제화시대에 맞는 시장개방과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경제 각분야에 정부개입을 축소하며 도농간,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보고 하였다.

농업은 현재와 같은 소농구조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하였으나 산업화 추세로 현재 200만호인 농어촌 가구수가 130만호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농림수산업을 생산력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농촌공업개방과 농촌지역개발정책, 은퇴농가에 대한 연금지원과 영세농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마련, 농지, 산지, 바다를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이용하는 국토자원 정책이 유기적으로 일괄성 있게 추진될 때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제7회 전국 양돈세미나 개최 「2000년대의 양돈산업과 발전방향」

제7회 전국양돈세미나가 「2천년대의 양돈산업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지난 9월21일 오전 10시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양돈연구회(회장 우영제) 주최, 축산시보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농림수산부 중고기축과 이인형 과장의 「2000년대의 양돈정책」을 비롯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돈 육종방안」(선진축산(주) 정영철 박사), 「만성질병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대책」(서울대 수의대 박용복 교수), 「전업 양돈농가의 사양관리와 개선방안」(제일농장(주) 안기홍 과장), 「돈육 수출확대를 위한 구조개선 및 사육체제 확립」(축산시험장 양돈과 정숙근 박사), 「인력시장과 시설측면에서 본 전망과 대책」(삼양사 시험농장 유성필 과장) 등이 각각 발표되었다.

양계인 여러분!
축산업의 선두주자인 양계산업의
지위와 명예를 계속 지켜나갑시다.
끊임없는 내·외부의 불리한 여건을
일치 단결하여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